

지방자치·종합

광주시 학교용지 미납금 1429억원 상환대책 없다

관광안내 구축 사업은 국고 반납…예산 편성 허점

광주시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학교 용지 매입비 미납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안내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50%를 확보하지 못해 5억여 원의 국고를 전액 반납하는 등 일부 예산 편성에 대한 혼점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광주시에 제출

한 '2009년도 광주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부액은 1429억 18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7년~2009년까지의 미납액 335억 4500원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과 분할해 납부하기로 협의했지만, 1999년~2006년까지의 미납액

1093억 74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납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해 관광안내구 축지원사업(국비·지방비 각 50%)을 위해 국고보조금 6억 9000여만원을 전액 수령했지만, 지방비 50%를 일부 밖에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금 불용액 5억여원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업주관

부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수요조사와 더불어 시 예산담당관 실과 긴밀한 협조 아래 확보 가능한 예산을 신정한 뒤 이를 고려해 국고보조금 신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사용하고 있는 유리알 카드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강사료와 출연료 등의 인건비 지출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는 유리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결산위원회는 따라서 유리알 카드의 이용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조금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중 인건비 성 경비는 자부담으로 유도하고, 물품구입·사용료·임대료 등 유리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1회 1차 정례회를 열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전남도의회 민선 5기 첫 정례회

15일간 회기 조례·추경안 처리…예산 결산 승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6·2 지방선거 이후 첫 정례회에 들어갔다.

광주시의회는 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9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서는 조호권 의원(북구 5)이 발의한 평생교육진흥조례안과 김보현 의원(서구 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차치법규 조례안 9건과 2010년도 제2회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도로시설물 명지 정 동의안 등이 처리된다.

이밖에 개회 첫날인 이날 진선기 의원(북구 1)이 5분 발언을 통해 아

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칭 '성폭력 없는 광주민들기 운동본부' 설립을 주장했고, 문상필 의원(북구 3)은 대북 지원 및 의약품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는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원 3명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이날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국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254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 일정의 회기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강

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전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주 의원 등 15명 발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허강숙 의원 등 12명), '전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경수 의원 등 10명) 등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또 '2010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09 전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안건도 처리한다.

의원들은 이밖에 쌀값 안정대책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하고,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농협 전직원에 정치후원금 강제모금 물의

농협중앙회가 최근 직원들에게 '2010년 국회 농수식품 위원 후원계획'이라는 업무 연락을 내려보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농협과 농협노조 등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19일 기획실 대외협력팀 명의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2010년 국회 농수식품 위원 후원계획(안) 업무연락'을 전직원에게 발송, 농수식품위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연락 내용은 ▲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조작 ▲후원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600명이며 반드시 기부 현황을 보고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관련 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후원할 수 없다. 따라서 농협이 조직적으로 내부연락망을 통해 모금을 강제한 것은 뇌물공여 등 위법성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초의원 10억 이상 재력가 17명

광주 동구 채명희 의원 26억원 최고…12명은 마이너스 신고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의원 17명(광주 4명·전남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12명(광주 2명·전남 10명)으로, 대조를 이뤘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시보에 공개한 신임 구의원들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동구 채명희 의원(비례대표)이 26억 40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남편 소유의 전·답과 임야(15억 6000여만원)를 비롯한 본인과 남편, 자녀 이름으로 15억 5000여만원의 상가와 주택 등 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복구 차경섭 의원은 24억 2600만원을 신고해 구의원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어 남구 강원호 의원은 13억 3000만원을,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서구 이병완 의원은 12억 4200만원을

신고했다.

동구 조종진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때에는 23억 9000만원의 거금을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8억 4500만원을 신고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자녀와 손자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반면 남구 배진하 의원은 마이너스 5300만원을, 서구 김은아 의원은 마이너스 44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이날 전남도가 공개한 도내 기초의원 재산등록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 138명 중 10억원 이상 재력가는 13명이었으며, 수입차를 신고한 의원도 8명이나 됐다.

최고 재력가는 영암군의회 김연일 의원으로 36억 8900만원이었으며, 주원식(순천), 이화동(함평), 김복실(장흥), 김성희(광양) 의원 등이 10억원 이상이며, 수입차를 신고한 의원도 8명이나 됐다.

반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10명으로 김기호(구례) 의원이 -2억 3310만원을 마재주(장흥) 의원이 -1억 8788만원을, 문길선(구례) 의원은 -1억 51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최권일·김지율기자 cki@kwangju.co.kr

작년 기초생보자 90만가구 육박 전체인구 3.2% 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가구가 지난해 90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수급자 수자로만 따지면 모두 1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88만 2925가구로 2008년의 85만 4205가구보다 2만 8720가구가 증가했다.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69만 875가구와 69만 1018가구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

71만 7861가구와 75만 3681가구로 7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후 2005년 80만 9745가구, 2006년 83만 1692가구, 2007년 85만 2420가구로 거의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 가구를 2001년과 비교하면 불과 8년 사이 20여만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면서 기초생보 수급 계층이 크게 증가해 향후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

초생보 수급 가구 가운데 일반세대가 30만 2202가구로 전년보다 1만 522가구 늘어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가장 커졌다. 어머니와 아들인 모자 세대는 8만 6961가구로 전년보다 4081가구, 노인세대는 24만 4529가구로 1400여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소년소녀 장학생대는 1만 3533가구로 전년보다 오히려 748명 줄었다.

기초생보 수급자 수로 보면 지난해 156만 9000명으로 전년의 153만 명보다 3만 9000명이 늘었다. /연합뉴스

한국 농업 R&D 투자 OECD 최하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최하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은 1일 발간한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5년 농업 R&D 투자가 명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네덜란드가 연평균

0.8%로 다른 비교대상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네덜란드의 1998년 R&D 투자/부가가치 비율은 1.24%에 달했다.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국가군은 일본, 덴마크, 독일, 일본,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R&D 투자가 명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포르투갈(0.02%), 그리스(0.04%) 등과 비슷한 0.09%에 그쳤다.

/연합뉴스

좋은 토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